

국가균형발전 위해 동분서주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 국회에 LX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 건의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 / 더불어민주당, 전주11)는 29일 국회를 방문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를 건의했다.

지난 8월 19일 LX는 경북과 스마트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경북 경주 등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교육센터 후보 부지를 제출받았다.

이에,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긴급감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바로 성명서 발표 및 LX 본사 항의 방문을 통해 최강화 사장으로부터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전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건립부지 결정 권한이 있는 LX 이사들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LX 드론전문교육센터는 다음달 이사회에서 최종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위 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하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을 만나 이전기관 탈전북 문제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을 전달하고, LX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소속·파생기관을 이전한 지역에 건립하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역균형발

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LX가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며 "LX의 이번 행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처사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9일부터 1박 2일간 남원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전북도의회 전체의원·사무처 직원 연찬회 개최

전북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9일부터 1박 2일간 남원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박명홍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실현의 선제 대응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론에 대해 강의했

다. 또한, 이청수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재정통제'를 주제로 한 강의도 함께 추진했다. 관계부처의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송성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찬회가 의회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공

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의원과 직원들이 소통하며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이후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보충역 여권 발급, 제대 6개월 전부터 가능해져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여권 발급 가능 시점이 복무 만료기간 2개월 이 전에서 6개월 이전으로 당겨졌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

인 경우에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무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여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용어인 '개호(介護)'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인 '간병(看護)'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또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은 사

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자료를 피해자의 이혼·사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로 규정해 피해자 부모에 대한 위자료 차별을 없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한·영 자유무역협정 서명에 따라 협정의 이행을 위해 영국을 셰이프가드 조치(긴급수입제한) 대상 국가에 포함하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조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을 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뉴시스

"계엄령 문건작성은 황교안 체제 힘이 발단"

군인권센터, "검찰, 기무사 계엄문건 부실 수사" 주장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이 계엄문건에 2017년 2월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재차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관련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료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논의는 2017년 2월10일 이뤄졌다. 조 전 사령관이 그날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 및 문건의 수기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관련 제보자들은 이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는 걸 본 이틀"이라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제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한 전 장관은 2017년 2월 17일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조 전 사령관에게 '한번 해보라'고 말하면서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2월 17일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의가 시작됐다는 취지인데, 센터의 추가제보에 따르면 문건 논의는 그보다 일주일 가량 앞선 2월10일 시작

됐다. 또 계엄령 문건은 기무사 서기관이 2월 13일 작성해 2월 16일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이른바 '계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는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이 만나기 전인 2월 17일 오전에 열렸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검찰이 수사 당시 한 전 장관의 주장과 다른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전 장관의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문건 작성의 발단이나 TF 구성일자 등이 담긴 해당 진술이 불기소사유서 등에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센터는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계

엄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 방문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또 김 전 실장이 2016년 10월 작성을 지시한 문건에 담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서 대처 방안 등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내용과 같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당시)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센터는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고 한다"며 "10개의 문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文 의장 "검찰개혁법, 오늘 본회의 안 넘긴다... 12월 3일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 이후인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해 이를 놓고 문 의장은 국회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문을 구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 와 문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 29일이지만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가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한국의당은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된 만큼 법사위

고유법안인 것으로 봤다.

다만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의 관행이기는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기간 180일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현 시점에서 180일 간의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은 충족했지만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지난 9월2일 넘어 온 시점을 고려하면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57일에 불과해 90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 의장의 결론이다.

한 대변인은 "따라서 법사위 이관 시점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열심히 일하는 의회
책임을 다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의 눈이 되어
시민의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가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